

통일을 준비하는 법조인 ③ 한명섭 변호사



“인권, 내정간섭 아니다… 北 재판은 요식행위 주변 압력보다 주민의 인권의식 자각이 중요”

피의자의 신병을 다루는 형사소송절차는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다. 통일법률사무소 한명섭 변호사(사시 32회·연수원 22기)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격년으로 펴내는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북한의 헌법과 형법 전반에 드러난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인권 보호 대상이 모든 주민이 아닌 ‘일 하는 사람’에 한정된다거나, 기준이 모호한 형법체계는 인권 신장에 걸림돌이다. 지난 2일 ‘2018 북한인권백서’ 회의 직전 변형 인근 카페에서 만난 그는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 민주주의를 일궈냈듯이, 국제사회의 압력보다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北, 국제사회 비난에 변화

-2016년 백서에서 ‘북한은 인권에 대해 ‘철저히 내정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점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내정불간섭 원칙이 강조된다. 예를 들면 북핵도 내정문제다. 유엔(UN) 회원국이라면 국제 규범인 세계인권선언문을 준수해야 한다. 보면 기준에 맞춰진 규범을 두고 북한은 내정간섭이라고 한다.



한명섭 변호사가 2일 서울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메트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근대 초기 국가는 멀찍이 떨어져, 서로를 간섭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는 아파트 단지가 됐다. 아시아동, 유럽동처럼 붙어있다. 그런데 어느 집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하면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관리사무소와 학교 선생님, 이웃들이 나서야 한다. 그걸 내정간섭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요즘 북한이 내부적으로 법규를 바꾸면서

을 끊어 팔면 극형에 처한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는 ‘교통질서 단속을 강화한다. 위반시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포고문에 대해서는 변협과 국제사회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북한은 일단연구 없다가 내부적으로 바뀌었다. 긍정적인 변화다.”

여성 권리보장·아동 권리보장법 등 변화 ‘긍정적’ 北의 재판소, 판사 역할 별로 없고 변호인도 형식적 피고인의 무죄 주장·새로운 증거수집 기회도 없어

국제사회의 비난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09년 개정헌법에는 ‘인권’이 처음으로 나왔다.”

-북한 헌법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근로인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명시한다. 내용 그대로 노동하는 사람의 인권만 보호한다는 의미로 봐야 하나.

“그렇다. 2009년 헌법이 나오자, 일부는 북한이 드디어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고 봤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결국 기존의 인권관에서 바뀌지 않았다. 북한은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인권 보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달리진 점은.

“2010년 제정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등 변화가 있어왔다. 포고문 역시 김정은 시대에 들어 바뀌고 있다. 특히 처벌 규정이 들어있지 않아서 긍정적으로 본다.”

-포고문이란.

“거리 곳곳에 붙이는 포고다. 입법부가 만든 형법이 아닌 인민보안성의 행정 명령이다. 우리로 치면 마약사범 특별 자수 기간 같은 개념이다. 예전에는 포고문에 협동농장에서 탈취하거나 구리선

법정공방 없는 형사재판

-북한 형법은 형벌 부과 기준이 행위가 아닌 위반 정도다. 그래서 법원이 위반 정도가 보통인 경우~극히 무거운 경우로 판단하면 가벼운 교양처분과 사형을 쉽게 오간다. 특히 죄형법정주의도 모호해서 사형이 쉽지 않다.

“정상이 극히 중한 경우’에 대한 기준은 판단하는 사람 마음이다. 내부적인 기준이 따로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 측면을 보면, 구성요건을 달리 해야 한다. 현재 북한식 형법이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하다.”

-장성택 처형도 같은 맥락인가.

“특별군사재판소에서 바로 결론이 나, 상고 할 기회가 없었다. 북한은 최고재판소에서 모든 사건을 1심으로 다룰 수 있다. 삼심제인 우리와 달리, 북한은 삼심 이심제다. 시·군인민재판소와 도재판소, 최고재판소 중에서 재판을 두 번만 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장성택의 특별군사재판소는 형사소송법에 없다. 인민보안부 출신 탈북자에 따르면, 정치범은 최고재판소 판사들이 내려와 현지에서 재판한다.

일반적 형소법에 없는 재판이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처럼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절차가 북한에는 없다는데.

“수사원의 초동수사 이후를 담당하는 예심원에서 영장을 청구하면, 검사가 이를 발부한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국은 검찰이 피의자를 최대 20일 구속수사한 뒤 기소해, 기나긴 법정싸움에 돌입한다. 북한은 수사원이 범죄혐의자를 최대 10일 구금할 수 있고, 예심기간은 4개월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정을 안 지켜 8개월씩 가둔 사례도 있다. 대신 재판이 단숨에 끝난다.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 노동당원인 인민참심원이 재판 당일 피고인이 어떤 형량을 받게 될 지를 확인한다.

판사의 역할은 별로 없다.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니, 변호인도 형식적인 변론에 그쳐 의미가 없다. 피고인의 무죄 주장과 새로운 증거 수집 기회가 없다. 북한에서 변호사는 반 공무원이다.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 안에 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조선변호사회가 사건을 배당한다.”

-북한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영향을 줄 방법은.

“가장 큰 동력은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다. 과거 유신 시절을 생각해봐. 국제사회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국민이 모르면 바뀌지 않는다. 북한은 현재 배급제가 붕괴돼 소유 개념이 생겼다. 정부가 메뚜기식 장사를 단속하면, 여기에 반발해 욕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여기서 조금씩 나아가 인권의식으로 이어진다.”

/글·사진=이범종기자 jaker@metroseoul.co.kr

한명섭 변호사는...

-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與野 3개 교섭단체, ‘폭염·혹한’도 재난에 포함키로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의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는 7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폭염’이나 ‘혹한’도 재난 개념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관련 법안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 사안이 있다”며 “합의된 두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TF 회의 직후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는 소개되지 않았으나, 이날 공감대를 마련한 민생법안에는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도록 한 은산



바른미래당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TF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K뱅크의 경우 증자가 어려웠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향적으로 규제를 풀자는 취지”라며 “오늘 보유 한도를 놓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만큼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해당한다. /연합뉴스

“D램시장 경쟁심화우려 과도 기존제기 전망의 반복 불과”

김동원 KB증권 연구원

KB증권은 7일 D램(DRAM) 시장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과도하다며 SK하이닉스에 대해 투자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0만원을 유지했다.

김동원 연구원은 “지난 6일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외국계 투자은행의 목표주가 하향 조정 영향으로 추정된다”며 “(하향 조정) 이유는 4분기 데이터 센터용 서버 D램 수급 불균형 완화, 낸드(NAND) 공급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존 시장에서 제기된 전망의 반복에 불과하며 새로운 우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D램 선두업체들은 내년 설비투자가 감소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격차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D램 시장 경쟁 심화 우려는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최근 SK하이닉스 주가는 내년 삼성전자 공급증가에 따른 판가 하락 우려가 가중되며 변동성이 확대하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내년 메모리 사업에서 수익성 위주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kmh@